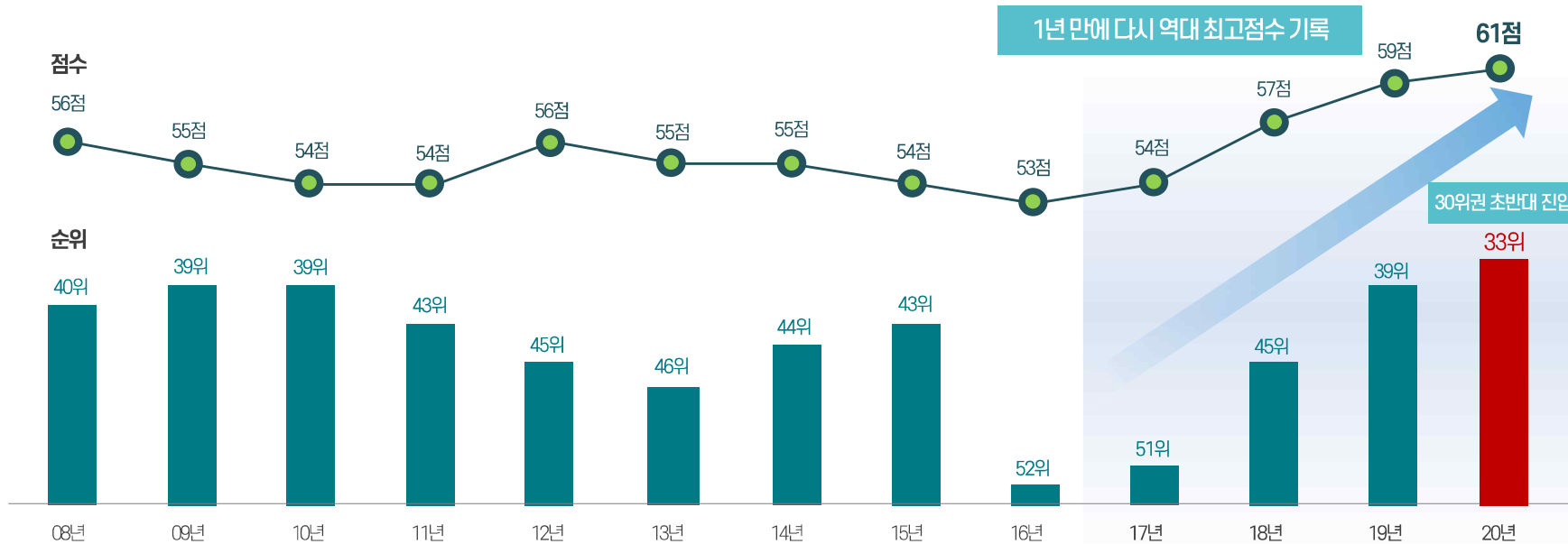


ISSUE TALK!

2020 반부패·청렴 성과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20년도 부패인식지수(CPI) 세계 30위권 초반대 진입,
국가별 순위 39위에서 33위로 연속 6단계 상승
아시아 최고 청렴국가로 도약



CPI그래프 ['20년 부패인식지수 (CPI)]

1. 반부패 청렴정책 성과

공공기관의 청렴수준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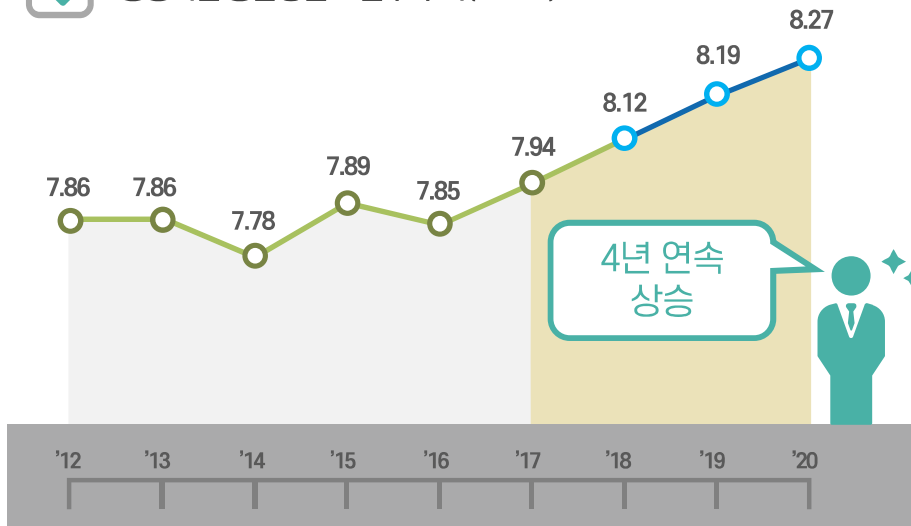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의 지속적 상승
공공부문 공정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점수 추이 ('12~'20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점수 추이 ('12~'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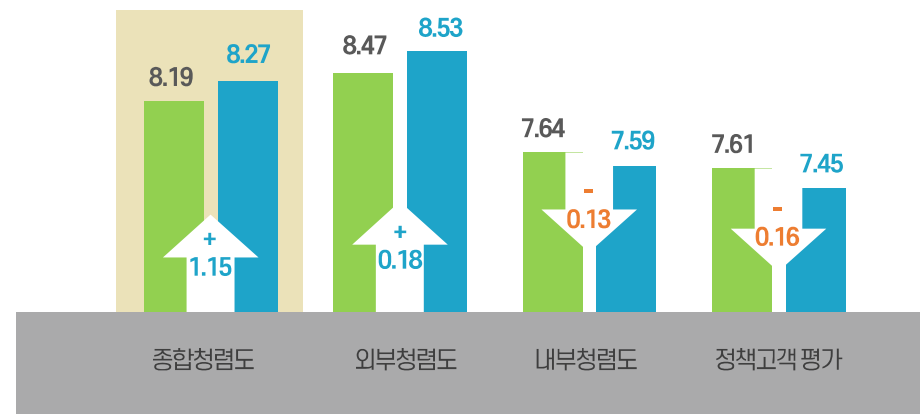
(단위: 점)



종합 청렴도 및 각 영역별 점수 비교 ('12~'20년)

(단위: 점)

—19년 —20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결과

출처: 국민권익위원회(2020,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지침)

2.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기관 및 대상자



적용 대상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적용 대상자

(공직자등)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공무상심의·평가등을 하는 자

일반국민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

강원랜드의 모든 임직원(근로계약을 체결한 단기근로자)과 배우자, 공무수행사인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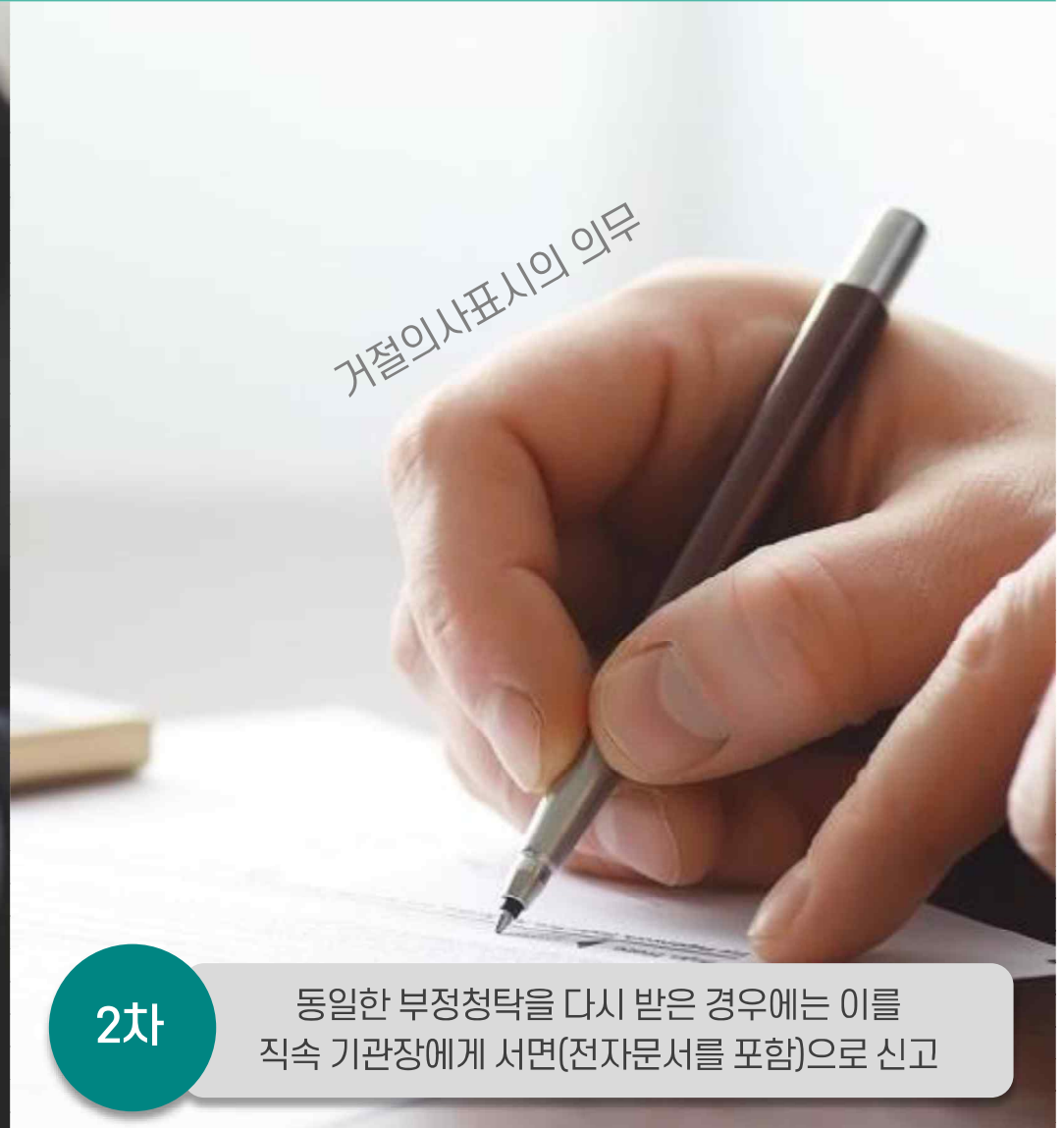
2.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부정청탁 금지



1차

그런 부정청탁은 거절합니다.



거절의사표시의 의무

2차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직속 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신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

2.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부정청탁 금지 위반시 처벌 수준



유형	위반행위	처벌수준
부정청탁금지	1. 공직자등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제재 없음
	2.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률 제23조 제3항]
	3.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 (청탁자가 공직자가 아닌 경우)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률 제23조 제2항]
	4.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 (청탁자가 공직자인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률 제23조 제1항]
	5.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법률 제22조 제2항]

2.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부정청탁금지의 예외 사유

- ①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행위
- ②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
- ③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 법령 등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운영 등 개선에 관한 제안·건의
- ④ 기한 준수 요구, 진행상황·조치결과에 대한 확인·문의
- ⑤ 확인·증명 등의 신청·요구
- ⑥ 질의 또는 상담 형식으로 법령·제도·절차 등 설명이나 해석 요구
- ⑦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2.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금품등 수수 금지



금품등 수수금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이 없더라도
그 직위·직책 등에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됨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



수수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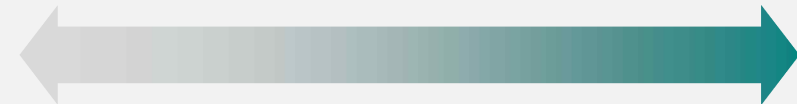


매회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00만원 기준
대가성 여부 불문

100만원
초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등 수수시
수수금액의
2~5배 과태료 부과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등도
공직자와 동일한 제재를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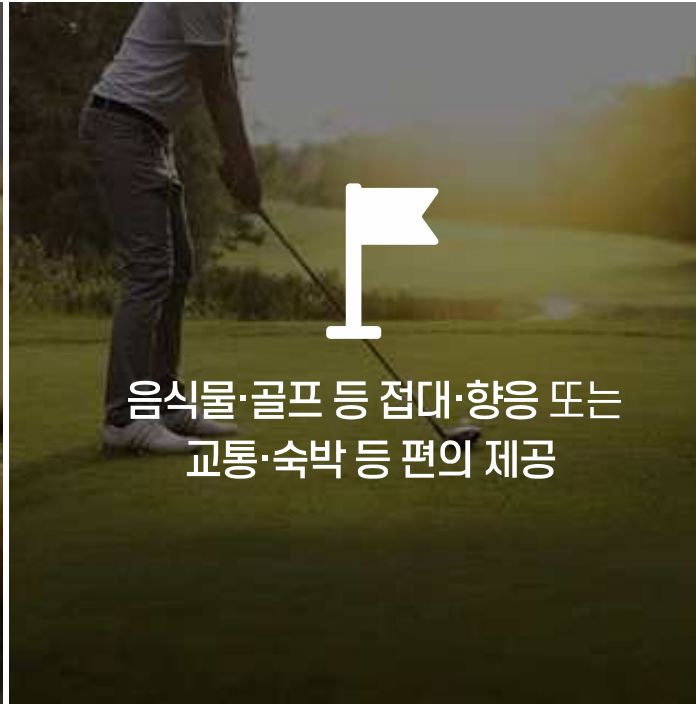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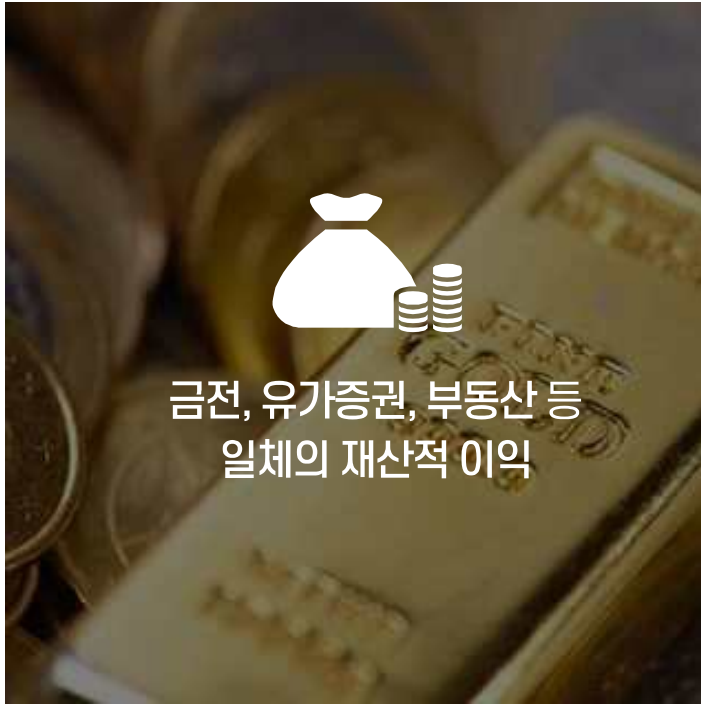
강원랜드의 임직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됨

2.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금품등의 종류 및 예외적 허용



금품등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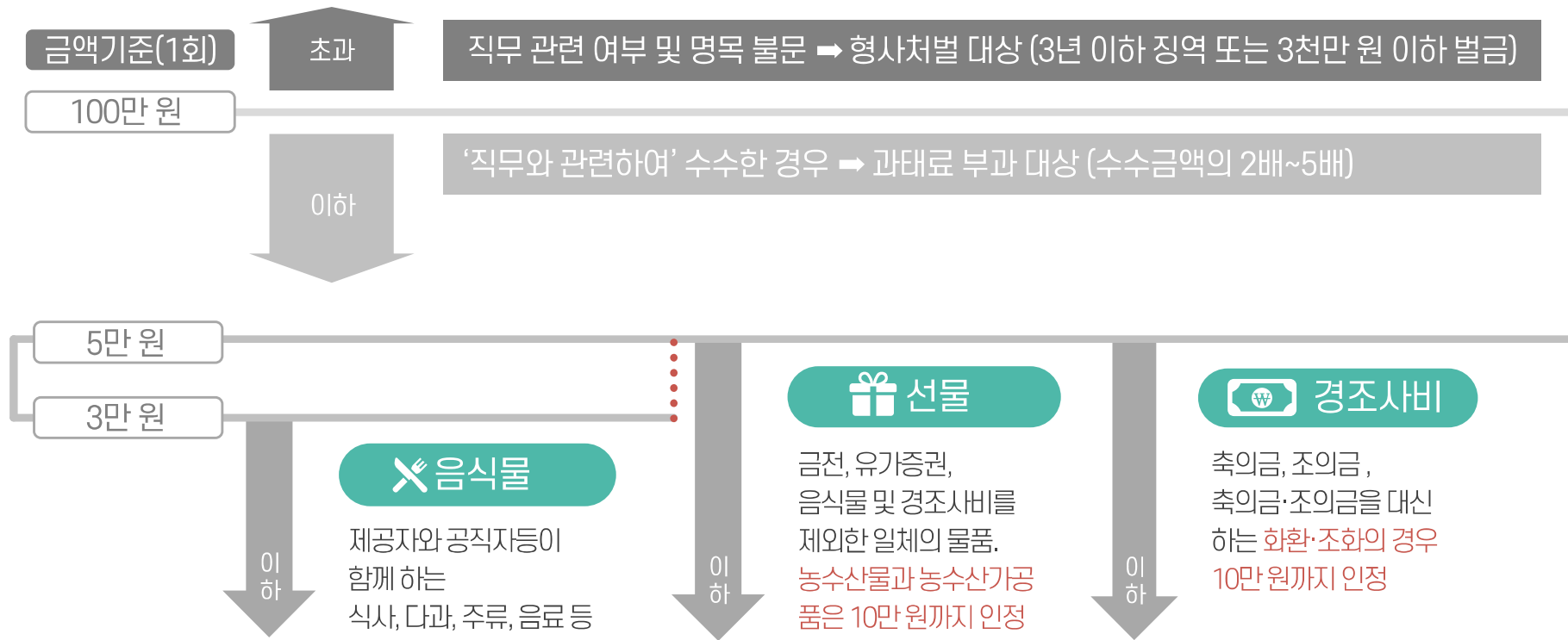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1. 공공기관 또는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이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홍보용품 등 또는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2.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사교, 의례, 부조 목적의 금품 수수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 가액기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안의 **음식물(3만원)·선물(5만원)·경조사비(5만원)**는 예외적으로 허용
단,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 → 과태료 부과대상(수수금액의 2배~5배)

2.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단위: 만원/1시간, 기고의 경우 1건)

구분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
1시간당 상한액	40만 원 (직급별 구분 없음)	100만 원
사례금 총액 한도	60만 원 ※1시간상한액 + 1시간상한액의 50%	제한 없음

외부강의 기준금액 초과 시 처벌수준

위반행위

기준금액 초과 강의 사례금을 수수한 공직자등

제재수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법률 제23조 제4항]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 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됨**

3.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현황 및 위반 주요사례



위반 신고사례 : 총 14,100건 ('16년 9월 28일-'18년 12월)

유형	부정청탁	금품 수수	외부강의
비율(%)	26.7%	13.7%	59.6%

금품등 수수 대표 사례

- A씨가 수차례에 걸쳐 경찰관 B씨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99만 원을 100만 원 이하의 '쪼개기'로 B씨에게 제공
- 지방 항공청 소속직원 22명이 해외 출장 시 항공사가 제공한 공항라운지 무료 이용, 항공기 좌석 승급 등의 부당 특혜 수수



3.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현황

공무수행사인에 의한 금품등 수수 사례



- 은행의 지점장급 간부 갑은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중앙부처에 파견되어 부실금융기관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하던 중,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공적자금 투입 여부 심사를 받고 있던 A저축은행 대표 B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식사와 3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받음
 - 갑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 받은 것에 해당하여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정청탁 사례



- 음식점 운영자 A가 오수처리시설 미달임에도 친구를 통해 공무원 갑에게 설치허가를 청탁함
 - 공무원 갑이 거절을 했다면 처벌 대상은 아님, A의 친구가 공무원에게 청탁 내용을 전달한다면 처벌 대상이며, 음식점 운영자 A는 공무원 갑이 청탁을 거절해도 처벌 대상임



- A사 지원자의 아버지가 지인인 공공기관 A사 상무에게 딸의 채용에 도움을 청함
 - 지원자의 아버지는 청탁금지법 상 '제3자'에 해당.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 해당됨

금품수수
당신을 노리는
덧입니다.



“

단 한 명의 부정한 행동도
모든 구성원의 책임

”

